데스크 시각

배달의민족, 언제쯤 이름값 할까

박 진 표
경제부장

거래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고대 시장의 자릿세, 중세 도시의 통행세는 단순한 금전 제공이 아닌 공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당시 그 대가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들어 이 단순하고 공정한 거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디지털 기반 배달 플랫폼은 일상 속 필수 인프라가 됐지만 공정하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떠넘기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수료 전쟁, 광주시의 반격

결국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한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 2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면서 매출 구간별 중개이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업주 부담 배달비도 조정했다. 과거 최대 9.8% 일률 체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업주 부담비용은 크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는 무료였던 포장주문에도 6.8% 수수료를 붙였다. 손님이 직접 매장을 찾아와도 '배달앱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배달의민족은 지난 6월부터 1만원 이하 주문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광고비와 결제 수수료까지 합치면 실질 부담률은 변함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달의민족이 국민적 반발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

재무지표를 보면 답이 나온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4조 3226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DH 보유 주식 5372억원 어치를 매입·소각했다. 국내 소비가 만든 이익이 상당 부분이 해외로 흘러간 것이다.

결국 국내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첫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 선택권 확대, 수수료율 산정 기준 개선, 약관 협상 절차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 역시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올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들도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민간 플랫폼 '위메프오'와 손잡고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땡겨요'를 추가해 두 개 앱 병행 체제로 확대했다. 중개이용료는 2%대,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

성과는 수치로 입증된다. 2025년 여름 현재 가맹점 1만 5800곳, 누적 주문 198만 건, 누적 매출 488억원, 광주지역 배달앱 시장 점유율 17.3%로 전국 공공앱 평균(약 4%)을 크게 웃돈다.

중앙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1차 추경에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등 활성화 예산 650억원을 반영했다.

광주시의 모델은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입점률 확대, 결제 편의성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 등 민간 플랫폼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공 배달앱의 성공 조건으로 세 가지를 조언한다.

첫째, 품질 경쟁력 확보다. 입점 음식점 다양성, 결제 시스템 안정성, 고객 서비스 수준이 민간 플랫폼과 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수수료·광고비·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의 선택이다. 플랫폼의 힘은 결국 사용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착취의민족, 오명 벗으려면

광주시의 도전은 지역사회가 자본 유출을 막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의 편리함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변화된 구조를 외면한다면 도전은 지속되기 어렵다.

광주 동구에서 오랜 기간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국집 등 일부 맛집이 아직도 공공앱에 등록하지 않고 배달의민족을 통해서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대표 사례다.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은 백의의 민족, 의를 중시하는 민족, 서로 돕는 공동체를 연상시키는 나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일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이를 '착취의민족'으로 부른다는 점이다. 이름이 주는 울림과 실제 행태가 괴리될 때 사람들은 냉소로 응답한다. 배달의민족이 앞으로도 그 이름을 계속 쓰고 싶다면 상징만 빌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지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배달의민족'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배달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은 공정한 공동체적 약속 실천이다. 지금부터라도 제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社說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사활 걸어라

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와 지역대학 총장단, 기업과 경제계 인사가 참여했다.

정 전 총리의 "전력 수급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가장 빠르고 좋은 선택은 광주"라는 덕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과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점이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유치위는 시민유치위원단 모집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붐을 조성하고 유치 전략 자문과 대정부 건의, 전문가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광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소버린 AI'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다. 인공지능 시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고성능 두뇌로 불린다. 그런 만큼 지자체마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은 국제 해저케이블 관문이라는 네트워크 허브를, 대구는 민간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는 점을, 충청권은 수도권 근접성과 산학연 협업 기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는 일찌감치 AI 중심도시를 표방했고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민간 컨소시엄이 입지와 설계를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인해 입지 선정을 정부가 아닌 기업이 한다는 점도 유치를 낙관하기 힘든 점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핵심 입지 조건은 전력과 인프라, 인재다. 광주는 세 가지 여건을 모두 갖췄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을 상대로 이런 경쟁력을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다면 'AI 중심도시 광주'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전공의 복귀에도 공보의 등 필수의료는 썰렁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극히 저조하다.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의 공중보건의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자도 필요 인력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광주·전남지역 수련병원의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원율은 60%대에 머물렀다. 전남대병원은 390명 모집에 63%인 244명 지원했고 조선대병원은 159명 모집에 122명이 지원해 76%를 기록했지만 광주기독병원은 정원의 50%만 채웠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인데 정원의 10~20% 밖에 지원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올해 전남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충원율도 34.8%로 전남 시군에서 204명을 요청했지만 71명 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전남을 비롯해 강원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전남의 경우 24명 모집에 8명만 지원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젊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병원에 근무하겠다고 계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과 숙소 및 주거비,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반응은 썰렁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외면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의료 취약지역인 광주·전남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37개월로 18개월인 일반 병사보다 2배 가량 많다. 차제에 과감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공보의 제도를 살려야 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젊은 의사에 국한하지 말고 제약 조건을 완화하고 병원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은펜칼럼

선물에 담긴 메시지

옥 영 석
㈜농협홍삼 대표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뒷얘기들이 많았지만 그중 백미는 양측이 주고받은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선물이란 게 값비싸고 진귀한 것이면 좋을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의 처지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의례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조선기술과 'MASGA' 협력을 상징하는 금속 거북선과 카우보이 모자, 트럼프의 신장과 체형을 감안한 퍼터를 선물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광으로 간직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참모진까지 기프트룸에 초대하여 골프공과 와이셔츠 등 선물을 고르게 하고 모자와 메뉴판에 사인을 해주었다니 내심 만족스러웠던 모양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만년필이 외국산 명품이 아닌 우리나라의 펜 전문공방에서 만든 수제품이었다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2019년 트럼프가 첫 임기를 맞아 방한했을 때 서명한 펜도 이 공방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많은 펜이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몽*랑 만년필로 사인을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수하게 평소 즐겨 쓰던 모*미 네임펜으로 서명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은 의전에 맞지 않는다거나 국격을 운운하며 갑론을박했고 청와대에서는 급기야 대통령 서명용 펜을 따로 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호두나무나 로즈우드 등 원목의 결을 살려 제작하는 이 펜의 가격이 8만원에서 18만원 정도라니 그 또한 놀랍고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그것보다 스무 배는 비쌀 워*맨이나 파*로 서명하고 있었다면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 모르긴 해도 세계적인 갑부 트럼프의 눈에는 익히 아는 명품이 흔할테니 그저 그런 물건, 돈만 내면 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듯 국가 정상외교에서 선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국의 문화를 상징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신중하게 고른다. 정상외교에서 등장하는 소품은 하나하나 모두 의미를 담고 있다. 옷과 넥타이 색상, 브로치, 머리핀 등으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2014년 여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준비한 선물은 홍삼중의 홍삼이라고 불리는 천삼이었다. 이는 홍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한해 생산되는 전체 홍삼 중에서 약 0.5%에 불과한 진귀한 것이다. 대대로 중국의 황제들이 천수를 누리기 위해 찾던 인삼을 시진핑에게 선물한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준비했다는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인삼은 오래전부터 국빈외교의 단골선물로 한국을 알리는데 한몫을 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의 일이다. 여왕의 방문을 통보받은 한 대학에서는 여왕과 영국왕실이 한국의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약학대학에서 인삼 성분과 효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자기로 만든 다기세트와 인삼차를 선물하여 호평을 받았다.

재위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방문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우리나라와 고려인삼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한다. 그는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맞아 여의도광장을 방문하여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라는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구절로 인사를 하여 100만 신도들과 국민들을 사로잡았다.

주교황청 대사를 지냈던 분들에 의하면 교황이 홍삼차 이외에도 홍삼엑기스를 즐겨 드셔서 바티칸의 주교들과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도 고려인삼 열풍이 불었다고 한다. 당시 바티칸 한국대사관에는 항상 인삼차를 가득 보관하였고 주요 인사와의 만남에서 인삼차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정도였다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브랜드와 가격표가 아니라 받는 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닐 터, 얇은 월급봉투에 우울해하고 차례상 물가 걱정에 애태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 고

인종차별을 넘어 존중과 포용의 공동체로

김 정 이
전남도의원

20여년 전 일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외국인 노래자랑을 시청하고 있었다. 한 동남아 출신 근로자가 진행자로부터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한참 생각하다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을 미개인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차별한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이라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당시는 지금처럼 애완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인터뷰 내용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고된 한국살이의 서러움을 담담히 갈무리하던 그의 표정이 생생히 기억난다.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불행히도 상황은 여전하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의식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농어촌으로 시집온 이주민 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사망 사건 뉴스는 끊이질 않는다. 올 초에는 지역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농장주로부터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근에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피부색이 어둡고 한국보다 GDP가 낮은 국가에서 온 노동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고 대체할 노동력이 없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야 할 일을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대신해 주고 있다. 그들을 마땅히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자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던 시민 69명이 경찰의 무력과 폭압에 의해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후 비극적 인종차별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유엔총회에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마침내 3월 21일, 역사적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지정됐다.

지금의 대한민국,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차별과 편견을 먼저 돌아보고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한 언론사가 전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마주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의 외형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인권 감수성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자신의 민낯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고용주나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차별과 학대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또는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며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값싸게 소모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인종과 국적,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이 아닌 존중,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맹꽁이와 금개구리

맹꽁이는 몸통 길이가 3.5~5.5cm 정도이고 좌우로 길며 머리는 몸통에 비해 작고 주둥이 또한 작고 짧다. 두꺼비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수컷은 턱 아래에 한 개의 울음주머니가 있으며 번식기에는 흑색으로 늘어져 있어 울음주머니가 없는 암컷과 구분된다. 맹꽁이라는 이름은 수컷들이 암컷을 찾을 때 내는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붙어졌다고 한다. 수명은 10년 정도이며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장마철에 번식하고 10월부터 겨울잠을 잔다.

금개구리 역시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양서류이다. 얼핏 보면 참개구리와 많이 닮았다. 몸길이 4~6㎝ 정도로 참개구리보다 덩치가 작고 눈 뒤부터 등을 지나 엉덩이까지 볼록하게 튀어나온 금색 선 두 줄이 인상적이다. 이 금색 선 때문에 금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배도 노란색이나 금색을 띠고 있다. 개구리들은 보통 수컷보다 암컷이 덩치가 큰데 금개구리는 암컷이 수컷보다 두세 배나 커 이채롭다. 수명은 6~7년이고 '쪽 쪽 꾸우우욱' 같은 소리를 낸다. 금선와 (金線蛙) 또는 금줄개구리 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이다. 맹꽁이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이들 양서류가 보호종이 된 데는 급속한 환경변화가 영향을 줬다. 양서류가 많이 사는 논이나 습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었고 황소개구리 같은 새로운 천적이 나타나면서 생태계 혼란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멸종위기 식물인 맹꽁이와 금개구리 보호에 나선다고 한다. 2023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발견되자 2200여 개체를 포획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와 익산 다래못으로 이주를 완료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아쉽다. 지금은 들을 수도 찾아보기도 힘든 것에 대한 그리움에서겠지만 그보다도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관리를 못 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